



'97 축산정책과제와 대책방향

농림부 축산국

I. '96축산시책평가

1. 규모화 진전과 함께 안전성문제 크게 대두
 - 축산업의 규모화·생산성 및 품질수준 향상
 - 전업규모 축산농가수 증가
 - 젖소(50두이상 사육농가수): ('92)717→('95)1,325→('96.9)1,558
 - 주요 생산성·품질 및 위생지표 변화
 - 한우고기1등급 출현율: ('93)10.7% → ('95)12.9 → ('96.P)18.3
 - 원유1급(세균수)출현율: ('95.1-10) 68.9% → ('96.1-10)73.3
 - 소값 안정대책의 적기 추진등 축산물 수급안정
 - 광우병파문등 소비위축에 대응, 소수매및 소비홍보 추진
 - 우유위생논쟁이후 감소된 우유 소비와 증가된 분유재고 문제를 해소 하기위해 우유소비 확대 및 국산분유 사용 적극 유도

- 축산물안전성 문제에 적극대처
- 절박도축문제, O-157 발생보도, 프탈레이트 검출문제등을 계기로 사육에서부터 도축·유통에 이르는 안전성강화 종합대책 수립·추진
- 경쟁력제고를위한 제도개선 적극 추진
- 배합사료 부가세영세율 전면적 용키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
-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 방안, 행정쇄신위원회 상정중

2. 제기된 문제점

- 경쟁력제고사업 추진에 불구, 원가상승·경영애로등 발생
- 조사료생산기반등 국내 부존자원의 개발·이용 부족
- 국제 사료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으로 생산비 증가요인이 됨
- ※ '92년이후 '95년까지 생산비 절감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왔는데 '95년 하반기이후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으로 생

산비 증가요인이 됨.

- 주요 축산물 생산비
- 비육우(생체Kg당):('92) 5,509 원 → ('95) 5,484(연△0.1%)
- 우유(원유Kg당):('92) 428.3원 → ('95) 412.6(연△1.2%)
- 일부 축산단지의 경우 의욕에 앞선 시설투자 과잉 및 경영능력·기술수준·운영비 부족등으로 경영상 애로 초래
- 개방·위생과 환경문제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과 이해 부족
- 축산물개방이 이미 된 것으로 인식, 원가절감등 경쟁력강화노력 미흡
- 위생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·홍보에도 불구, 질병발생, 잔류물질 검출, 죽은 가축 처리 등에 대한 농가의 인식부족과 개선노력 미흡
- 아직도 분뇨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농가가 있고 분뇨처리비용 개념으로만 인식, 환경문제 지속 제기

II. 여건변화와 정책과제

1. 축산정책 여건변화

- '97.7월 소 및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축산물 완전 개방
- 소 부산물: 족발·꼬리·내장(관세 19.4%), 염장·훈제·건조고기(29.1%), 쇠고기 통조림(77.1%) 수입자유화
- 냉동 돼지고기 관세 33.4%로 수입자유화
- 냉동 닭고기 관세 30.5%로 수입자유화
- 금년에 이어 품질·위생에 대한 소비자 관심 지속 증대
- 가축사육의 대규모화·집단화에 따라 질병 감염기회는 증대되는 반면, 국민소득 증대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위생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
- 외국산과 국내산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교·선택
- 우리 축산물의 품질·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회복이 개방초기 수요기반 확보에 매우 중요
- 환경문제 중요성 증대 및 규제 강화
- 기존 농가의 분뇨처리 미흡으로 신규 축사 설치시 인근 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움
-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축산분뇨 규제 강화
- 개별 축산경영체의 기술수준·경영능력제고 필요성 대두
- 개별농가의 기술수준, 경영능력 등 운영상태를 종합점검하여 문제점 발굴·보완, 전문경영체로 육성

2. '97년도 정책과제

가. 한우산업

- '96.12.20현재 소값은 2,586천원으로 '96안정목표가격내에 있으나 사육두수가 크게 증가('95.12. 2,594천두 → '96.9 2,891)하고 최근 소값이 계속 하락세에 있는 점을 감안, 소값안정을 위한 대책 사전검토 필요
- ※ 2001년 개방시 예상가격 200만원 대비 연도별 안정목표
 - '96: 250~260만원,
 - '97: 240~250,
 - '98: 230~240
- 사육두수가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강구
 - 한우경쟁력제고사업(394억원)이 소 입식수요를 유발하지 않도록 기존시설 개보수나 풀사료 확보 농가에 국한하여 지원
 - 향후 소값전망에 대한 농가홍보로 송아지 입식자제 유도
- 2001년 개방에 충격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질고급화와 함께 지속적인 원가절감 강화노력 필요
- 수요량의 30%내외를 차지하는 250~260만두 수준의 고급육산업으로 정착 및 조사료기반 확충 등 생산비절감 추진

III. '97 축산정책 추진계획

기본방향

- 충격없이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면밀한 대책 강구
- '97.7 돼지고기·닭고기 개방 사전 대응

- 2001년 소 및 쇠고기 개방 대비 한우산업육성대책 추진
- 경쟁력강화를 위한 축산산업의 내실있는 추진
- 사육규모확대 위주의 시설투자 지원을 지양, 규모에 맞는 사양기술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·교육기능 강화
- 선도경영체의 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는 경영혁신제도(벤처마케팅)도입 및 정책지원과의 연계
- 축산물 안전성 강화대책의 실효성 확보
-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산·도축·가공단계의 총체적 노력 강화
- 가축질병근절, 동물약품 사용방법등에 대한농가 교육·지도
- 도축단계에서의 잔류물질 및 미생물오염도 검사체계 확립
- 축산물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홍보
-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 지속 추진
- 기존시설 설치 농가의 분뇨처리실태 점검 및 보완대책 수립
- 분뇨처리 중요성 인식제고와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확대

1. 축산물의 생산절감 및 품질향상
가. 양축농가의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제고
- '92년부터 본격 시작된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에 따라 농가의 시설개선 투자가 상당수준 이루어

졌으므로 앞으로는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중요

- 농가가 자기의 경영능력, 기술, 위생·분뇨처리 실태등 경영요소별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비교대상(모델)을 제시하여 취약요소를 발굴, 개선토록 해 나가는 벤치마킹제 실시

나. 가축노동력 중심의 축산전업농 육성

- 발전, 성장가능성이 있는 양축 농가들에게 호당 3~5억원 한도의 중장기 자금을 종합지원하여 2004년까지 축산전업농 2만호 육성
- 양축자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하여 축산경영자금으로 사용토록 유도

다. 축산단지과 계열화사업 정착

- 축산단지의 사업부실화 예방을 위해 축산기술연구소 전문가들의 사전심사·평가 선정절차 제도화등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
- 가축계열화사업은 효율성을 높이고 브랜드육 체계로 발전되도록 지원

라. 전산화사업과 한우개량사업의 내실있는 추진

- 전산화사업 조기 정착으로 전국 규모의 계획교배 실시, 과학적인 수급 및 방역관리와 함께 개방대비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 기반 마련
- 수정란이식에 의한 한우쌍자생산으로 생산비 절감

마. 주요 축산사업 현장 평가 및 보완대책 지속추진

- '96자체평가에 이어 그동안 추

진해 온 사업들에 대한 점검·평가하여 보완·개선

2. 축산물유통구조개선

가. 신선 냉장의 브랜드육 유통체제를 구축하여 신뢰성 확보

- 도축, 가공, 판매 기능을 연계한 선진국형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

- 2000년까지 10개소 건설:5개소는 건설중, 5개소는 '97년 선정

- 기선정된 5개소중 '97년 3개소, '98년말 2개소 완공계획

- 소매단계의 냉장육 유통 및 신뢰유통 촉진

- 종합처리장, 브랜드업체 가맹점 설치 지원: '97) 25개소, 94억원

- 한우전문점 설치 지원:('96년까지) 450개소, 1,080억원 → ('97) 80개소, 140억원

- 기존 간이도축장(37개소)중 '97년말까지 도축장으로 시설 개선을 하지 못할 경우 폐쇄 조치

나. 부정축산물유통방지

- '97년부터 소매단계에서 식육의 부위별, 등급별 판매 및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, 젓소, 유우고기로 구분판매 의무화

- 부정축산물 지도 단속 강화

- 밀도살, 주수행위, 둔갑판매, 냉동답차 생우운반 등 대상

- 시·도, 경찰합동단속체계 구축 및 명예감시원 위촉 운영

다. 식육처리전문인력 양성

- 국내 최초의 식육처리기술훈련기관 건립 추진 ('95~'98년)

- 제2회 식육처리기능사 자격검정

시험('97.8월 시험실시 예정)

3. 축산물 안전성강화대책 추진

가.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

-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 농가의 손실을 방지하고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'96.6 가축전염병근절대책 수립

- 2002년까지 돼지콜레라등 주요 전염병별 근절목표년도 설정

- 생산자단체와 양축농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단위의 공동 방역사업단을 구성, 예방주사등 자율방역 실시

- 주요전염병의 예방주사 및 검진등 가축방역사업의 이행 확보

- 살처분보상금을 신고시점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조기신고 유도

나. 도축·도계 단계에서의 위생관리 강화

- 육류중 유해성잔류물질(항생물질, 합성항균제등)에 대한 검사 강화

- 도축장과 도계장에서 육류중 병원성미생물 오염도 조사

-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(O-157:H7)등의 오염도를 검사하여 작업장 위생상태 개선도모

다. 가축공제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소각로 증설

- 폐사축의 절박우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'97년에 소에 대해 가축공제제도 시범사업 추진, 가입한 가축 폐사시 시가의 80%까지 보상

- 폐사축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전국권역별로 대형 소각로 4기 설치, 축협 운영

라.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농가 교육·홍보 강화

- 동물약품 휴약기간 및 성장단계별 사료 구분급여등 농가 준수사항들에 대해 '97 상반기중 전체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홍보·교육 실시

4. 축산분뇨처리대책 추진

가. 축산분뇨의 처리방향

- 축산분뇨는 본래의 용도인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
- 2010년까지 완전자원화하여 환경 친화적 축산으로 정착
- 1단계('96~2000):자원화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해소방안 강구
- 2단계(2001~2005):자원화기술 발전심화 및 미처리 농가해소
- 3단계(2006~2010):축산분뇨의 완전자원화로 분뇨처리사업 정착
- 유기질비료 공급활성화를 통해 유기농업 및 농산물 품질향상

나. '97 추진계획

- 분뇨처리시설 설치자금 지원확대 및 예산 지원기준 조정
- 지원예산:('96)1,182억원 → ('97)1,274억원(7.8%)
- 지원단가:(현행) 개인·공동 구별지원 → (개선) 축사면적당 단가(원/㎡)
- 보조지원:(현행) 1천만원이상개인시설은 제외(50%) → (개선) 모든 시설에 동일보조율, 용자율(30%)적용
- 지원한도:(현행) 개인 1억원, 단체 10억원 → (개선) 개인3, 단체15
-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운영실태 조사('96.11~'97.1) 및 보완

대책 수립·추진

- 분뇨처리 표준설계도(8종)제작 보급으로 농가 설계비 부담경감
- 농가에게 분뇨처리의 중요성 및 처리기술 교육 강화
- 부족한 톱밥수요 대체를 위해 압축가열한 왕겨(팽연왕겨) 생산 시설비를 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(30개소, 2,640백만원)
-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중점추진
- '97 현장애로기술 기획연구과제로 채택

5.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

가. 축산물 가공법 관리경위

- 가공법 관리업무를 종전에는 농림부에서 관장해 왔으나 '84. 7. 19 대통령 비서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장관 협의와 대통령재가를 받아 보건복지부로 이관
- 축산물 관련업무 부처별 관장업무
- 농림부: 가축생산·도축과 원유의 생산·집유
- 보건복지부: 육류가공·운송·판매와 시유·유제품의 생산·판매

나.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

- 가축의 생산에서부터 도축·가공·유통·판매에 이르는 지도·감독체계가 양분되어 축산물의 안전성확보 시책추진 애로
- 축산물 검사업무의 이원화로 생산자·사업자의 불편 및 행정낭비 초래
- 권한이 없는 농림부에서 가공품개발, 유통개선, 유통중사자 교육 및 가공·유통산업 육성정책

추진 애로

※ 각국의 사례

- 원료생산과 가공업무의 분리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일원화 추세
- 미국, 프랑스, 호주는 농업부에서 일본은 후생성에서 관리
- 캐나다와 이태리는 농림식품부로 '93년과 '94년에 각각 일원화다. 일원화 추진 내용
- '94. 10 업무분장 이원화에 따른 불편사항등으로 민원인, 관련단체, 지방자치단체등으로 부터 문제가 계속 제기
- 행쇄위에서 정식의제로 채택 심의중
- '96.4.24 실무회의에서 농림부로 일원화 결정한 바 있음

'97 달라지는 주요제도·사업

- (1)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 적용('97.7.1부터)
- (2)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제도 개선('97.1.1부터)
- (3) 축산경영자금 확대 및 지원방식개선('97.1.1부터)
- (4) 식육판매업소 육류 구분판매제 시행('97.1.1부터)
- (5) 축산물방역관리·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

